

비대면진료 계도 끝나가는데... '약처방·플랫폼' 진통 여전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 野, 의약품 오남용 우려...플랫폼 시스템 개선 촉구 복지부 "법안 설득 계속 할 것...불법행위 단속 강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약 처방 오·남용과 초·재진 대상 범위에 대한 허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제화가 다시 불발됐다.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짐에 따라 의료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시범사업 보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처방전 위·변조 우려와 진료 대상에 대한 쟁점이 해소돼야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상태다. 쟁점 중 하나는 처방전 위·변조였다. 야당 의원들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플랫폼을 통한 처방 시

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진료에 유용했던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PDF 전자 처방전 위·변조 우려, 비대면 진료 대상 확인 여부 등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종료와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을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은 재진 환자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박지 등 의료가 관 부속 지역 거주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현재 처방전을 PDF 파일로 발급 받아 처방전 자체가 위·변조가 가능하고 투약 일수 의약품, 약품명도 (오남용이) 가능해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플랫폼을 통한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뢰 대 환자로 진료해야 하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하다 보니 환자가 1년 치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어서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진과 초진 허용 대상에 대한 범위 설정 또한 쟁점이다. 또한 초진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의원은 "(당초) 재진 범위를 만성 질환으로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전제로 규정한 게 문제"라면서 "(초진 허용 대상자도) 거동 불편자 대상으로 한해 제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초진 허용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 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소

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등을 촉구했다.

비대면 진료 시 진찰료·약제비의 30%가 가산되는 수가가 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면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서비스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로 업체의 진입을 '신고제'에서 한층 더 강화한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3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 의료로 중개하는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 단체와의 소통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의료법 개정안 쟁점들이 하나씩 정리돼 이번에는 (통과)될까 했지만 안타깝게 됐다"면서 "법제화는 일단 법제화대로 노력하고 국회에도 계속 (법안)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 계도기간 종료 후부터는 의약품 오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과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6월1일부터 3개월 간 계도 기간에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별 다른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근절을 하기 위해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침 위반에 대해 건강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관련 위반된 내용 중에 처방이 제한되는 의약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단속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에 잘 대응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의견도 수렴해 보완점을 고민해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나기자



'의경 부활' 하루 만에 '조직 개편' 선회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이 현장 치안인력을 늘리는 후속 대책을 두고 갈피를 맞잡고 있다. 윤회근 경찰청장은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하루 만에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구속된 '아동성추행범', 檢 재수사해보니 누명

대검,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 선정

아동 2명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피해 진술로 구속됐던 억울한 피의자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구속한 수사팀이 우수수사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노정우 부장검사와 라혁 검사는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에 대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아동들의 피해 진술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를 석방한 후 무혐의 처분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카드사용내역 분석, DNA 추가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실제 아동들을 성폭행한 진범을 구속한 뒤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최나영 부장검사와 이동우·정은경 검사는 영아 2명을 출산하고 다음날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영아 시신들을 발견해 이들

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제2부 유정호 부장검사와 신동환·김승우 검사는 41억원 상당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행을 설계한 조직폭력배 출신 부동산 브로커를 밝혀내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 이후에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84명을 대상으로 70억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제2부 브로커와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줄피넴을 피고회복제로 속여 막게 한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피고인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추가 입건하고 강간상해죄 등으로 법률 적용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주지청 김지용 부장검사와 유효원 검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무고하고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밝혀내고 다른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등을 병합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재연 부장검사와 황호용 검사가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뉴시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